

'쌍특검법' 재표결서 부결... 자동폐기

최상목 권한대행 재의요구 쌍특검 의결정족수 200명

내란 특검 198·김건희 특검 196명 '찬성'... 여권 이탈표 4~6명 민주, 오늘 내란 특검 재발의키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한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을 각각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국회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른 재의결정족수는 200명이나 내란특검법은 2표, 김건희특검법은 4표가 부

족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특검법 6명, 김건희특검법 4명이다.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부결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은 내란특검법 5명, 김건희특검법 4명이었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김건희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해 2월과 10월, 12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수정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돼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우선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하고 내일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천 방식은 제3자(특검) 추천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제3자(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원내에서 논의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도모

민주 박희승 의원,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법안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국비 지원,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특례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급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6월 가결된 결과 전국 35개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병상이 유휴도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에 대응했으며, 이후 의료인력의 소진과 유출로 인해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동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인구감소로 지방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가적 위기 앞에 사력을 다했던 지방의료원이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지역주민과 지역을 책임지는 든든한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해, 의료 공공성 붕괴를 막아낼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이 부결된 뒤 퇴장하고 있다.

제11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 초청음악회

•일시: 2025. 1. 9~10. (목~금)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전주매일신문
•주관: 전북특별자치도 스키협회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참가문의: 063-288-9700(전주매일신문 본사)

사회자
송미령

명창
김민숙

색소폰리스트
박보성

바리톤
석상근

소프라노
송난영

첼리스트
김인하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2025년 새해 의정활동 시작

고창군의회(의장 조만규)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회기인 제313회 임시회를 열었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군수로부터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상임위원회 의안심사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2건과 산업건설위원회 5건 총 7건의 의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둘째날인 8일 본회의장에 회부되어 최종 통과됐다.

먼저, 심덕섭 고창군수가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2025년도 군정보고'에서 고창군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이라는 비전 아래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등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조만규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새롭게 맞이한 2025년은 제9대 고창군의회가 중간 반환점을 지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군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 없이 달려왔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역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여, 더욱 성숙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고창군을 만들어 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만규 의장은 이번 2025년 첫 임시회를 마치면서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한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 보고를 통해 올 한해 고창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정 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정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산림경영 지속가능성 제고

민주 윤준병 의원, '산지은행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8일, 임업경영 활성화와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시행하는 '산지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국가로서 산림은 목재 등 임산물을 공급하고, 수자원 함양, 산림복지 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분산적인 산림경영의 구조와 더불어, 산주의 고령화·부채산주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이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도 전국 산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유림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65%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유림 산주의 56%가 0.5ha 미만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3ha 미만인 전체 산주의 8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1ha 미만을 소유한 산주는 증가하는 데 비해 1ha 이상을 소유한 산주는 감소하고 있어 산림의 소유 구조가 보다 영세해지고 있으며, 고령화, 부채산주의 증가, 지속적인 장기투자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임업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사유림의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고령산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산지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지은행을 통하여 △산지 매매사업, △산지 임대차사업, △전업한 임업인의 산림경영 복귀지원, △산지연금 등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경영 규모의 적정화, 산지의 효율적 이용,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1인 1개 생계비통장 압류 못한다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재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 명시 법안 처리도

1인당 1개의 계좌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4명 중 찬성 26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이 골자다. 또한 이 계좌에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장 유고·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재석 267명 중 찬성 250명, 반대 2명, 기권 15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시행령이 아닌 법안으로 규정하고, 현재소장이 일시적 사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재판관이

임명일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또 임명일자가 같으면 연장일자순으로 대행하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국회는 출연연기관 원장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착수하도록 규정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외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국가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제2차회기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뉴스